트럼프 기소로 또 갈라진 美…“정치수사” vs “중대범죄”

공화, 바이든 지명직 인준 저지 선언…정권교체 뒤 바이든 수사 예고도

민주 “트럼프 구하려는 공화당 어이없어”…공화당 일각도 트럼프 비판

불법 국가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범죄로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직전에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전날밤 머물렀던 마아애미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을 출발해 마이애미 연방법원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다.

그는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올린 글을 통해 “법원으로 가는 중. 마녀사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것과 관련, 3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13일(현지시간) 미국사회는 또다시 분열된 양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정당한 사법 절차로 평가했으나, 공화당은 대체로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는 반응을 보이며 바이든 정부에 맞선 실력 행사를 예고하거나 정권 교체 뒤 보복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날 공화당의 J.D.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항의하는 의미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 당국자 인준을 전부 막겠다고 선언했다고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밴스 의원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법 집행보다 정치를 더 신경 쓰는 법무부의 가장 최근 피해자일 뿐”이라며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조 바이든의 정적을 괴롭히는 데 이들 당국자를 쓰고자 한다면 우리는 법무부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은가. 다음 공화당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가족, 그의 마약중독 아들이나 누가 됐든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할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켄 벅 하원의원(콜로라도)은 CNN 인터뷰에서 검찰의 증거와 트럼프의 변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가 정보를 잘못 다루고 그런 행동을 고의로 숨기려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난 분명 중죄범을 대통령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를 이끄는 피트 아구일라 의원(캘리포니아)은 “하원 공화당이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어이가 없다”며 공화당 내부의 친트럼프 세력을 싸잡아 겨냥했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출석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밖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전날 열린 대선 모금행사에서 여전히 많은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서 “우리는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언론의 계속된 질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역대급 가뭄에 파나마 운하 사상 최저수위 ‘중남미 젖줄’ 카툰호수 7~8월 대란 오나

“엘리뇨 현상으로 심해질 가능성”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가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가 올해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CNN방송은 13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의 전례 없는 가뭄 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파나마 운하는 세계 교역량 4~5%를 책임지고 있는데, 인근 가툰 호수의 물을 끌어와 선박을 이동시킨다.

따라서 가툰 호수의 수위가 파나마 운하의 흘수(물속에 잠긴 선체 깊이) 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가뭄으로 가툰 호수의 수위가 떨어지고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파나마운하청(ACP)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툰 호수 수위는 79.7피트(24.3m)인데 다음 달 1일 79.1피트(24.1m)로 내려간 뒤 지속해서 감소해 8월 14일에는 77.9피트(23.7m)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가뭄이 계속되자 파나마운하청은 최근 흘수 연속 제한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흘수 제한이 시행되면 배를 덜 가라앉혀야 하므로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선적량을 줄이거나 화물 운송 비용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툰 호수는 파나마 운하뿐 아니라 파나마 시티 등 인근 도시에도 물을 공급한다.

지난달 파나마 환경부는 가뭄에 따른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특히 농가가 밀집한 서부 치리키를 중심으로 농작물 수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파나마운하청은 “파나마 정부가 선포한 기후 비상사태는 파나마 운하가 담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언급해 온 바를 강화해준다”고 밝혔다.

문제는 엘니뇨 현상으로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가뭄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올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다고 세계기상기구(WMO) 등이 전망했다. /연합뉴스

‘인구 1위’ 넘보는 인도, 이제 해외여행 시장서도 ‘큰손’

내년 해외여행 지출 53조 예상

중국을 넘어 세계 인구 1위를 목전에 둔 인도가 해외 관광업에서도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상공회의소(FICCI)와 컨설팅업체 ‘난지아 앤더슨’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한 해 인도인들이 해외여행에 쓸 돈은 420억달러(약 53조4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229억달러)에 비해 83.4%, 팬데믹으로 여행이 위축된 2021년(126억달러)에 비해선 233.3% 폭증한 규모다.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아고다’의 옴리 모겐스턴 최고경영자(CEO)는 인도가 여행 ‘붐’을 경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 중인 해외여행 출발지”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해외여행 증가세는 상당 부분 인프라 개선과 항공업계의 확장 덕분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새 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현대화에 9천800억루피(약 15조2천억원)를 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개장할 예정인 아시아 최대의 노이다국제공항 프로젝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도에선 국내 지역 간 연결 계획에 따라 2017년 이래로 최소 73곳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작년 5950만명의 승객이 다녀간 뉴델리의 인디라간디국제공항은 올해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10대 공항’에 들었다. /연합뉴스

중국군 장성 “중국, 우크라 전쟁 예상 못 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가인 허레이(何雷) 중장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하지 못해 충격을 받았으며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허 중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SCMP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지금껏 평화의 여명이 오지 않은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부원장 출신인 허 중장은 중국은 전쟁을 종식할 유일한 해법은 협상뿐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의 현재 행동은 분쟁을 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대러시아 투쟁의 총알받이로 취급한다”며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면 미국에는 경쟁자·전략적 라이벌이 하나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평화의 대가로 러시아에 영토를 내주라고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려 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의 영토 보전과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